

“똑같은 일하면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줘야... 왜 최저임금 주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왜 정부는 공공 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똑같은 일 시키는 데 고용안정성 있는 정규직 임금이 더 많다. 잠깐잠깐 쓰는 똑같은 일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다. 최저임금을 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특히 공무원, 일용직, 비정규직은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준다. 사회 평균적으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이 이하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지 않느냐”며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라며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닌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더더욱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며 정부에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임금이 더 많아... 반대로 돼야”

“부처 고용 비정규직은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줘야”

“퇴직금·정규직 제도 정부가 악용... 노동부, 시정명령하라”

이 대통령은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퇴직금을 안 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그 제도(근속 1년이 지나야 퇴직금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2년 지나면 정규직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한다.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채용한다”며 “민간이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정부가 그러면 되나.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러 “이러면 안 된다”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면 한 달치를 더 주는 건데 웬만하면 그 전에도 주시라”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은 못해줄망정 불안정하다고 힘 없다면 적게 주면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다른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시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내란재판부·법외국죄 사법부 반발 확산... 與와 전면 충돌 진보 성향 평가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신중” 내란재판부법,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공감 與지도부·법사위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대립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내 처리를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외국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 법관들이 모인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헌 논란을 들어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여권 지도부는 재차 사법부의 신뢰 상실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법부와 여권 지도부의 괴리감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번주 법원행정처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통해 우려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 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외국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는 당초 회의의 의제였다. 다만 참석했던 법관 대표가 현장에서 안전을 발의했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 대표는 보다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에 내뿜었다.

물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론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가 병기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상고심을 두고 열린 임시회의와 비교하면 분위기는 달라졌다.

올해 6월 임시회의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두 배 더 많이 나와 부결됐다. 적어도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 외국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앞서 5일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외국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2·3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을 전속관할로 관련 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헌성 시비를 낳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통과한 안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9인 위원 중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다.

당장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정해져 있으나, 정권이 자의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려는 시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 외국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검사가 고의로 범리를 왜곡·조작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리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왜곡, 조작이 아닌지 불분명하고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추미에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정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손인혁 현재 사무처장도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원이 종국 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현재에 제정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는 조항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위헌성 및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결론을 미루고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728조’ 이정부 내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역대 최대 규모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규모를 넘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는 약 727조9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728조59억원을 제출했는데,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9조3000억원이 줄고 9조2000억원이 늘어 결과적으로 약 100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은 전입 정부가

尹정부 편성한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 사상 첫 700조 돌파

3대 특검 및 관공권·쿠광 상설특검 활동경비 30.5억 지출도 의결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대 분야 중에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6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에 121조4000억

원, 교육 분야에 99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 예산은 65조9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31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도 1억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농림·수산·식품에 28조원,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사회간접자본)에 27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27조3000억원, 환경 분야에 13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에 9조6000억원, 외교·통일에 7조원 등 예산도 이날 확정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활동에 필요한 예비비 30억5143만원 지출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내란·김건희특검 3차 수사기간 연장과 내란·순직해병특검 공소유지에 필요한 활동비 및 관공권·쿠광의혹상설특검 출범에 따른 활동비 등 경비”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